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위정자는 역사상 한번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보릿고개에 초근목피 빈곤 속에서 겨우 세운 나라가 또 다시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수호할 지도자는 없고, 사익이나 당락만 쫓는 정치꾼들로 넘쳐나고 있다. 또 다시 시민들이 의병으로 나서야 한단 말인가?

위기의 앞길에 놓인 생존균형과 세력균형의 장벽을 슬기를 모으고 협동협치 〈균형의 길〉로 지혜를 뭉쳐서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웁시다

-리더십 한림원 -

목 차

프로그램	5
------------	---

[제1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7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2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31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부 록]

리더십 한림원 목적, 연혁
(사)선진복지사회연구원 목적, 연혁

프로그램

1부

사회 : 이 정 숙_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2부

사회 : 이 정 숙_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 제 1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2) 제 2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3) 참관자 질의/응답

4) 총 마무리 발언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경제(일)와 복지(빵)의 균형시스템(행복)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토론]

경제(일)와 복지(빵)의 균형시스템(행복)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의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게 갈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와 정치계는 자기들의 사리와 당락에 함몰되어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이 올 스톱 상태로 빠져들고 경제위기와 외적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구조조정, 커져가는 부채공포,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수출전선 등 경제위기의 적신호는 커져만 가는데 아무도 방향을 잡을 조타수를 보이지 않는다.

-머리 위에는 핵폭탄 미사일이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외의존의 무대책으로 태평세월을 구가하고 있다. 내부의 방위산업 책임자 들은 방산 비리로 줄줄이 감옥에 앉아 있다. 동맹국은 더 이상 지원이 힘들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봐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안보를 송두리째 내맡기고 내부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실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헌법개정은 정파이해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역사는 타협과 조정을 못하고 눈앞의 적침에도 당파 갈등을 일삼고 공멸해 버리는 우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을 가치로 한 개헌과 특권이 공정사회를 갉아먹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할 시스템개조가 절실하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한국민의 평화적 집단지성 시위는 공정사회와 미래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유능하게 수행 하는 리더십이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 으로 협동협치 하여 최적효율(평형성=균형)이 달성되면 성장과 고용(일) 이 확대되고, 공평한 분배(빵)가 이루어 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안정된(행복)사회에 접근 할 것이다.

*협동협치(Collaborative Governance)=공공가치창출=협동(모든협력)+협치(민관협력)

**최적효율(Optimal Efficiency 공학,게임, 생체<Homeostasis 평형성=균형>)

가. 복지경제사회 시스템의 균형성 위기

1. 균형성 파괴 : 시스템 파괴(국가, 조직, 생태)

균형은 상반된 방향의 인력끌림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균형적 접근은 주어진 자원의 최적배분으로 효율성이 달성되고 평형성(균형성)과 복원력이 회복되어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고, 최적효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생체순환은 구성체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직기관들에게 전달하고, 하위 조직이 모여서 상위기관들을 형성하며 상호 협동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최적배분하며 자동조절 한다. 인간에게 체온, 맥박, 호흡, 혈당, 혈압 등의 항상성(Homeostasis:평형성)으로 나타나며, 자연의 균형은 기온, 습도, 대기, 오존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¹⁾

복지경제사회정책이 인간생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원균형과 인간생태의 총체성(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구성원의 정보네트와 자동화 인공지능(AI)에 의해서 최적자동화로 균형진화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복 칸막이 등에 의해서 전달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조절의 균형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복지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협치(Collaboration)운영 되고, 공동체의 귀속감에 의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서적 균형이 인간의 행복증진과 진화 발전을 가능케한다.

2.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균형적 효율

균형적 접근은 사회복지가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 생성균형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한다. 과소복지인 경우에 기초보장의 안전망이 심각한 불균형

1) All homeostatic control mechanisms have at least three interdependent components for the variable being regulated: The **receptor** is the sensing component that monitors and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n the receptor senses a stimulus, it sends information to a **control center**, the component that sets the range at which a variable is maintained. The control center determine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stimulus. In most homeostatic mechanisms the control center is the **brain**. The control center then sends signals to an effector which can be muscles, **organs** or other structures that receive signals from the control center.

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반대로 과잉복지인 경우에는 과잉부채에 의한 자원균형의 자동조절기능이 타격을 받아서 지속불가능 하게 된다.

① 평형성(균형성) - (지속가능, 기초보장, 재정안정, 정서안정)

- 자원균형 : 총체자원 보존, 재정균형
- 생존균형 : 생태균형, 생명유지 기초보장
- 생성균형 : 노동과 생존수단 교환의 균형유지

② 회복력(자동조절성) : 최적배분, 효율성 - (전달체계, 자활사업, 빈곤탈출)

- 자원의 최적배분 : 효율성
- 적정균형 : 제약조건 하의 최적효율

③ 통합성(총체성) : 공동체: (상호의존성) - (서비스통합성, 나눔공동체)

- 총체자원 공동보존(총체성) : 너와 나는 같은 뿌리(天人地 同根同體)
- 공존성 : (상부상조) = 모두나눔(=공동나눔) + 모두돌봄(=통합서비스)

3. 복지국가의 「균형의 길」²⁾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의 적정배분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의 위험을 겪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의 이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을 초래 하였으며,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를 발생 시키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복지경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의길에 제시된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2) Chung, Kyungbae,(ed).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표 1> 균형주의 통합체제 (Giddens, "The Third Way", 1998)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fficiency)	제3의 길 The Third Way (Egalitarianism)	<균형의 길> The Balanced Way (Sustainability)
1. 지속가능성 (자원고갈)	· 자원고갈 심각 (성장의 제약)	· 자원고갈 우려	1. 자원균형 (자연자원, 재정자원)
2. 성장정책 (총수요관리)	· 성장중심 정책 (공급경제)	·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2. 최적효율(Optim Efficie) *(지속가능성장)
3. 분배정책 (분배평등성)	· 빈부양극화 Income Polariz	· 평등성목표(p.66) Equality	3. 분배균형 (기본보장+성과보상)
4. 복지국가 (조합주의)	· 소극적 복지 (소극적 보장)	·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4.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자아실현
5. 고용수준 (완전고용정책)	· 고용유연성 (해고신축성)	· 적극적 고용정책 (훈련, 구직정보)	5. 고용균형(인력자본) (인력 기능망)
6. 정서균형(안정) (시설보호중심)	· 시설보호 (정서파괴)	· 가족중시 (민주적 가정)	6. 정서균형(가정같은) 나눔돌봄=정서충족
7. 세계화(-) Globalism	· 세계화선진국이익 -근린빈곤화	· 세계다원주의 Cosmopolitan Pluralism	7. 세계공존=(세계안전망) (빈곤, 재해, 개발)
8. 생태/환경 (낮음)	· 환경보호 (소극적)	· 환경문제 제기 (강조)	8. 생태균형 (균형적 순환=보존)
9. 거대정부 (정부/시민사회)	· 최소정부 (시민사회자주성)	· 적극적 시민사회 (적극적 정부)	9. 복지전달 협치 (전달행정 효율)
10. 혼합경제 Mixed Economy	· 시장경제(Market Fundamentalism)	· 신혼합경제 New Mixed Eco	10. 최적효율-적정배분 (경쟁/개입)
11. 집단개념 Collectivism	· 개인주의 Individualism	· 공동체 중시 Communalism	11. 공존질서 (공동체공존)
▣평등분배(재정위기)	▣시장경쟁(빈부격차)	▣중도복지(금융위기)	▣ 균형주의(통합성)

* 균형주의 복지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

외생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작동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생성된 소득(일)은 생존우선순위로 분배(뺄)되고, 정서적 균형(행복)수준이 충족된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 ① 생태균형 : (지속가능), 생태균형(생태/자원) - 지속혁신, 발전 동력
- ② 자원균형 : (총체자원), 재정균형, 자원고갈 - 신재생자원, 고령자원화
- ③ 소득창출 : (최적효율), 고용수준, 기술수준 - 발전동력 장치의 선도
- ④ 배분균형 : (적정배분), 기초보장(식, 의, 주, 교) - 자아생성 능력배양
- ⑤ 정서균형 : (행복안정), 자살률, 가정같은 사회(돌봄나눔) - 자기실현, 평화안정
- ⑥ 공존균형 : (사회통합), 공공책임, 재생기회 - 민주기회

4. 지속균형 정책지표: 생존 우선순위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결정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때 정치적인 약속들이 난무할지라도 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 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배분이 된다. 자원균형과 생태균형, 재정균형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성이 균형체재의 존속을 결정하므로 최우선순위가 된다. 다음이 생존수단인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고용수준(일)을 포함하는 생성균형이 분배균형(빵)을 가능케 하며 보다 앞서게 된다. 그 결과 최적균형(안정, 행복)이 진화 발전을 가능케 한다. **무상복지 제안이 사회통합을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표에서 정책판단 실험해 볼 수가 있다.

<표 2> 균형수준의 지표<시스템 지속성 판별>

우선지표 (weights)	①지속가능 (320)	②소득수준 (160)	③분배형평 (80)	④행복안정 (40)	⑤민주기회 (20)	⑥사회통합 (10)
균형수준⇒	지속균형	생존균형	분배균형	정서균형	기회균형	공존균형
구성요인	• 자원균형	• 성장수준	• 기초보장	• 모듬봉사	• 참여기회	• 공공책임
	• 생태균형	• 효율수준	• 모듬나눔	• 자아실현	• 권력분점	• 공존원리
	• 재정균형	• 고용수준	• 형평수준	• 재생기회	• 표현자유	• 공정원칙
	• 지속혁신	• 기술수준	• 공평배분	• 정서안정	• 다수결정	• 공평배려
타락수준⇒	*균형파괴	*소득독점	*질서파괴	*정서파괴	*자유방종	*갈등심화
	(퇴행장식)	(생존위협)	(안정파괴)	(행복파괴)	(의무포기)	(분규빈발)
⇐ (1차적 생존지표)				(2차적 안정지표) ⇒		

*가중치 예시: 생존지속성 판별 가정(지속가능이 최고선≥소득생존≥.....≥사회통합)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을 무시한 정책은 균형을 파괴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타락수준이 될 것이다.

균형성 파괴(시스템 효율화 = 균형회복)

- 복지의 타락(부실복지-전달장애-부채증가)⇒ 전달효율
- 시민의 타락(사익우선-부정부패-무질서)⇒ 법치효율
- 정치의 타락(국익실종-권력남용-부패결탁)⇒ 국익존중
- 경제의 타락(독점폭리-투기심리-공존무시)⇒ 합리질서
- 정서의 타락(가계부채-자살증가-행복감소)⇒ 정서안정

나. 한국개조: 리더십의 형성시스템

지금 우리는 국가를 지킬 장기전략이 비축되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한 번도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임진왜란 20일 만에 무너짐, 병자호란, 일제강점, 한국전쟁도 무너졌다. 임진왜란 때 코무덤, 병자호란의 환향녀, 일제강점기 강제 성노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전국 불인정, 6.25 전쟁의 초토화 등 국가가 백성을 못 지키는 사회심리의 상처는 우리 체질의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서 이제까지 자기중심적 흑백논리로 비타협적인 사회를 형성 시켰다.

<표3> 국가개조 리더십의 형성
(지도력형성과정-사회적지원)

리더십목표	← 시스템개조	← 해결과제
1.공정성(공정효율성)		
① 장기비전	← 국력비축추진**	← 한반도 전쟁상처, 임기응변 심리
② 권력책임	← 책임의 도덕률	← 권력무책임, 정치권 부패 무능
③ 특권부패	← 정피아-관피아	← 규제철폐망 사익그물망
2.공존성(공존협동협치)		
④ 민주타협	← 공존화해타협	← 후진정치, 노사공멸, 시민갈등
⑤ 나눔배려	← 따뜻한 봉사	← 배려 없는 자기독식, 권력남용
⑥ 흑백논리	← 중도타협 존중	← 갈등(네탓타령-내탓무시-흑백논리
⑦ 행복정서	← 협동정서 안정	← 행복수준 최하위, 최고자살률
3.공익성(공익배려질서)		
⑧ 공익책임	← 공존질서 교육	← 공동체 이익무시, 사익비리
⑨ 준법질서	← 준법정신 생활화	← 저항식 무법질서, 준법피해의식
⑩ 의식개혁	← 양보배려 교육	← 글로벌품위(배려, 양보)손상

* 국력비축(=효율강국): 총체국력 : 권력책임의무(Noblesse Oblige)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특권 정치인들은 입법 부정 결탁하고, 책임의무는 기피, 군대 간 아들 전화 받은 엄마는 군 지휘관에 호통치고, 정피아 관피아는 원전비리, 철도, 저축은행, 해난, 방산비리, 귀족노조, 지역이기, 안전사고에 연계된 갈등은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다시 시작 하자. 교육, 교육, 그리고 또 교육으로 개조해 보자(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다. 한국개조: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2016.1.25

한국이 주변강국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수준, 국방안보, 복지공존 등 주요 분야에서 국력을 비축해야 침략에서 국가를 보존 할 수가 있다. 우리규모의 작은 나라는 최적효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장기간 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구조 고도화를 지향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혁신구조, 정책의 성과 책임제로 재정균형, 총력안보체계로 모든 국민이 이스라엘과 스위스처럼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추고 초강력 독자방위능력 보유는 절체절명의 생존수단이다.

<표 4>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최적효율)

비전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1. 정치경제(협동효율, 최적균형)		
①경제재정	ㄹ 재정균형, 해외투자회귀(노사협동, 일자리)	← 노사 대 협동
②정치행정	ㄹ 특권망국(정책책임제, 규제일몰, 정책승계)	← (지속평가위원)
③과학국방	ㄹ 과학강군(산학협동-전산기능군-군산 취업연계)	← 제4정보과학
2. 국방안보(세력균형, 신뢰형성)		
④안보균형	ㄹ 국방국산-과학기술단-노출예방(전기,수도,가스)	← 국방의존취약
⑤외교균형	ㄹ 다원균형 선도, 평화기구 다원선도	← 균형선도전략
⑥통일균형	ㄹ 신뢰균형, 비정치지원, 탈북주민 자립	← 신뢰성 구축
3. 복지사회(기초보장, 협동협치)		
⑦협동복지	ㄹ 협동효율: 시장형 일자리 창출	← 재능기여 일자리
⑧기초보장	ㄹ 5대기초(소득-의료-주거-교육-서비스)	← 사각지대
⑨전달협치	ㄹ 공공-민간협치, 분절칸막이 방지	← 전달분절공공중심
⑩환경농업	ㄹ 환경농업: 환경도시, 태양발전 군집전략	← 환경 에너지

외교에 있어서는 연미화중의 균형전략 선도, 통일전략은 비정치 분야의 조건 없는 지원으로 생존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지효율로 공동체안정, 사회적 특권을 부여 받은 자는 상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상호 공존하는 배려와 타협이 없고,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건 강한 지속을 위한 환경도시 등 프르팩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복지의 균형적 개혁: (일과 빵, 행복)

복지전달체계의 장애 : 전달망은 효율적(민관협치-신속정확)인 변화대응

- ① 행정과잉: 정부의 공공중심-행정보고 요청 때문에 지자체는 업무수행 곤란
- ② 자원분산: 남발된 프로그램(360개)에 예산이 분산되어 미미한 전달
- ③ 놓고먹기: 업무의 칸막이로 외부 소통이 어렵고 형식적 무용한 업무 추진 등,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원화 문제, 정서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취약지역 문제 등 균형성 파괴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균형적 개혁방안을 제시.

<표 5> 복지시스템<균형의 길> 개혁방향

(전달효율 - 적정산출 - 성과평가)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1.생존균형(공존기회)	⇒<생태공존>	*평형성 회복(항상성)
①생존보장	-기초보장(사각지대)	①양극화(총규모 관리)
②생태균형	-생태다양성 파괴	②생태공존
③지속가능 평가	-과잉점유, 과잉소비	③적정성 평가
④사회갈등	-공동체 생존경쟁	④협동공존 의 처방,조정
2.자원균형(지속가능)	⇒총자원균형	<자원효율>: 최적배분
①자원균형	-자원고갈	①총체자원/대체계획
②재정균형	-국가부채	②재정안정 단계설정
③적정평가	-자원낭비	③적정성 산출
④고령자원화	-고령 재능기부, 기능사장	④고령인력뱅크
3.정서균형(안정행복)	⇒정서 파괴	<정서평형>:모듬돌봄
①삶의질 위기	-자살, 스트레스	①멘토링 봉사
②가족보호(가정갈등)	-가족해체	②위기상담
③노인정서	-노인소외	③노인봉사, 고령재가치유
④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④재능지도 멘토링
⑤장애인 취업	-장애차별	⑤기능교육
4.전달협치(공공-민간)	⇒전달불통	<통합효율>협동협치
①기관별	-기관별 개별사업	①성질별 통합조정
②부서별	-부서별 칸막이	②대상별 통합조정
③법률별,프로그램별	-동종이법, 사업별 칸막이	③규정통합, 모듬돌봄
* ④자원봉사, 나눔	-산발적, 중복낭비	④네트워크 형성, 재능기부
5.사각지대(취약계층)	⇒기초보장 사각지대	<통합조정=>복지+보건+정서
①빈곤, 장애, 정서	-빈곤의 악순환	①통합대책(자활자립)
②자기실현	-시간자원 낭비	②고령, 장애 자원화
③노인(고령자원화)	-자원낭비	③고령인력 자원화(독립정서)
④여성/가족/청소년	-가족해체	④종합대책(기능투자)
⑤자활기능	-자활프로그램 산발적	⑤기능교육, 창업지도

정 경 배

학 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경 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전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강의(복지경제, 복지재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복지경제)
Chairman, APEC, Ad Hoc Committee, SSN, 2000.

【주요저서】

연구활동 : "The Balanced Way", 2016, 출판예정
“생산적 복지”, “균형적 복지국가”,
“국민연금재정추계수리 모형”,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한국형 ㄹ복지경제모형”

논문 : “아시아 경제공동체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lishers, U.S.A.
"Altai 문화협력 구상“, 2015

제 1 주제



위기의 한국: 균형의 길



정 경배(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균형의 길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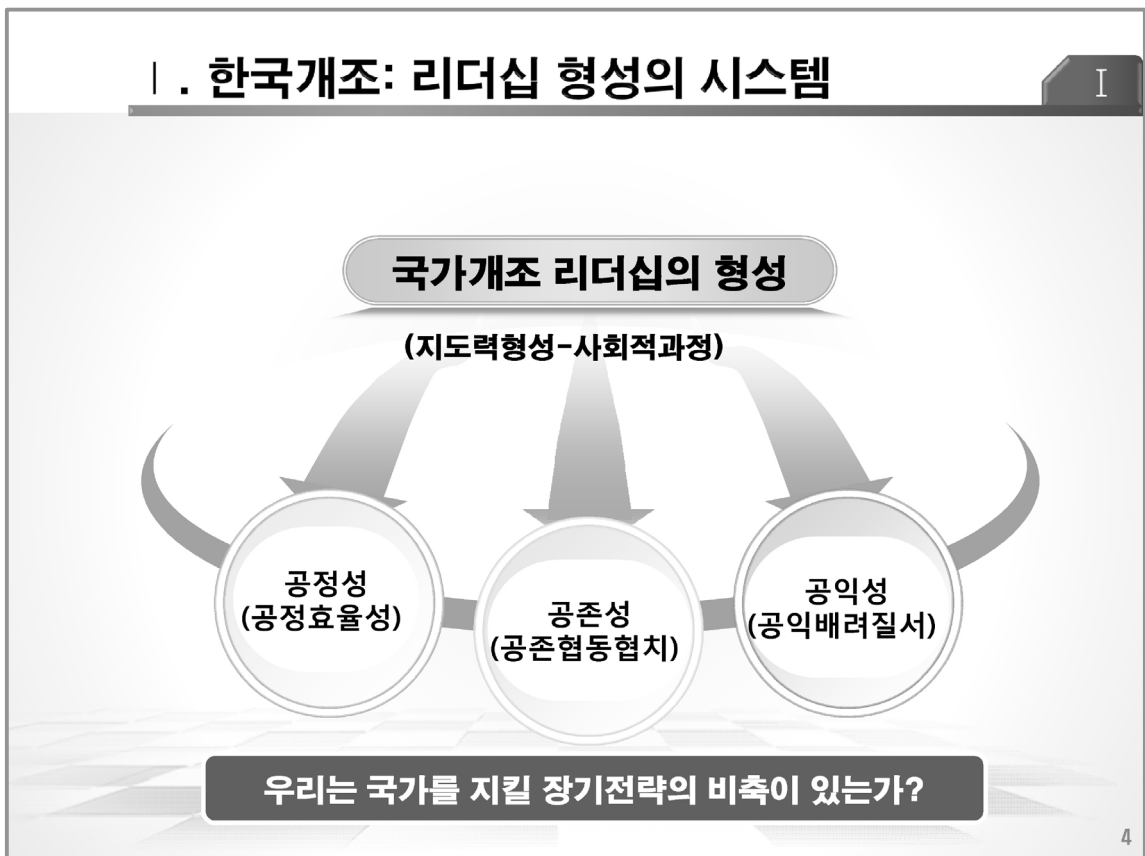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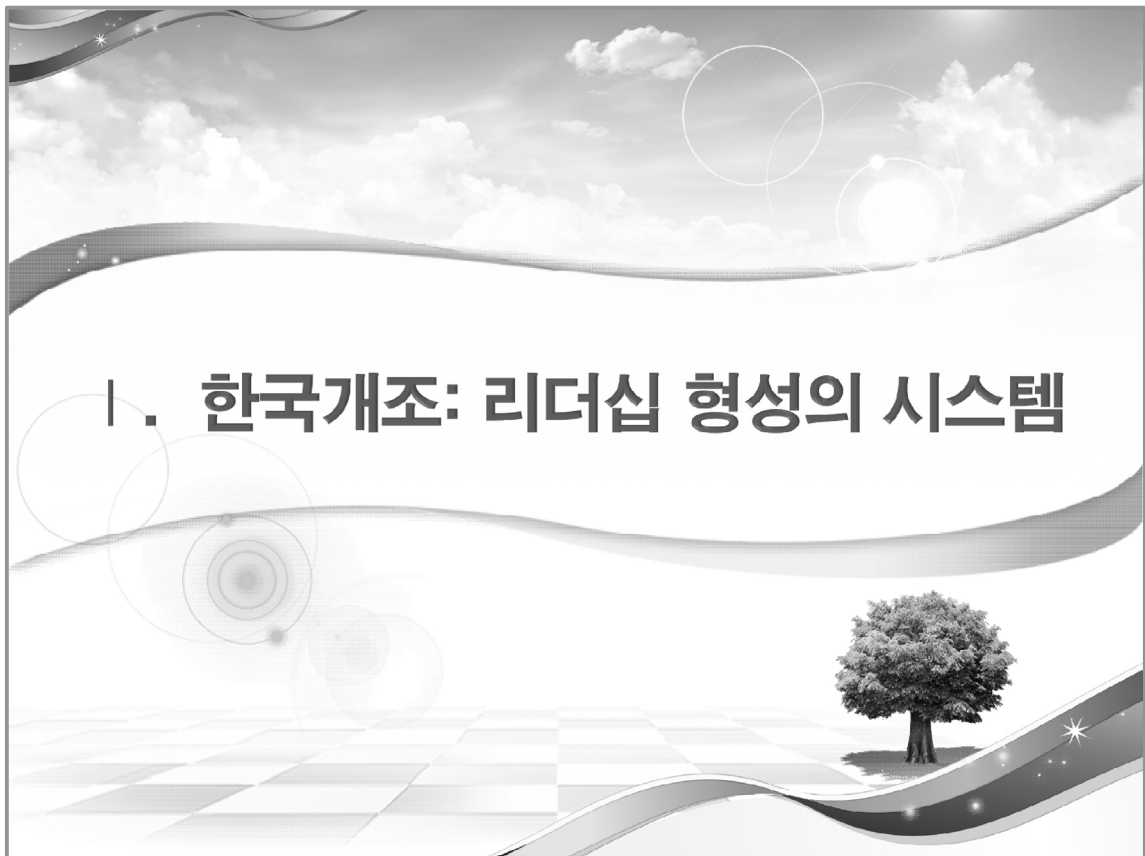
I 한국개조: 리더십 형성의 시스템

II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V 정책 결론





I . 한국개조: 리더십 형성의 시스템

I

1.공정성(공정효율성)

리더십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장기비전

◆국력비축 추진: 장기간 국력비축

◆국방대외의존: 자기방어 생존 능력 취약

권력책임

◆책임의 도덕률: 권리와 책임 동반

◆권력무책임 - 정치권 부패 무능

특권부패

◆특권부패사슬: 특권 공정질서 파괴

◆규제철조망 - 사익그물망(정피아-관피아)

5

I . 한국개조: 리더십 형성의 시스템

I

2.공존성(공존협동협치)

민주타협공존

◆공존 화해: 타협의 지혜

◆공존저해: 시민갈등, 노사대립, 후진정치

나눔배려공존

◆따뜻한 봉사: 나눔, 돌봄

◆권력 남용: 배려 없는 사리추구, 자기 독식

흑백논리타협

◆중도 의견: 흑백논리 타협

◆네 탓타령: 모든사안 타협부진, 내탓무시

행복정서공존

◆협동협치: 정서안정, 균형핵심

◆OECD: 행복 수준 최하위, 최고자살률

6

I . 한국개조: 리더십 형성의 시스템

I

3.공익성(공익배려질서)

리더십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공익책임

- ◆ 공익교육: 공공이익 존중의 교육
- ◆ 공동체 이익무시: 공권 통한 사익추구 비리

준법질서

- ◆ 공익준법: 공공질서 위한 준법 생활화
- ◆ 저항식 무법질서: 준법자 피해의식

의식개혁

- ◆ 공익의식 개혁: 양보배려 시민교육
- ◆ 글로벌품위: 배려,양보없는 품위손상

7

I . 한국개조: 리더십 형성의 시스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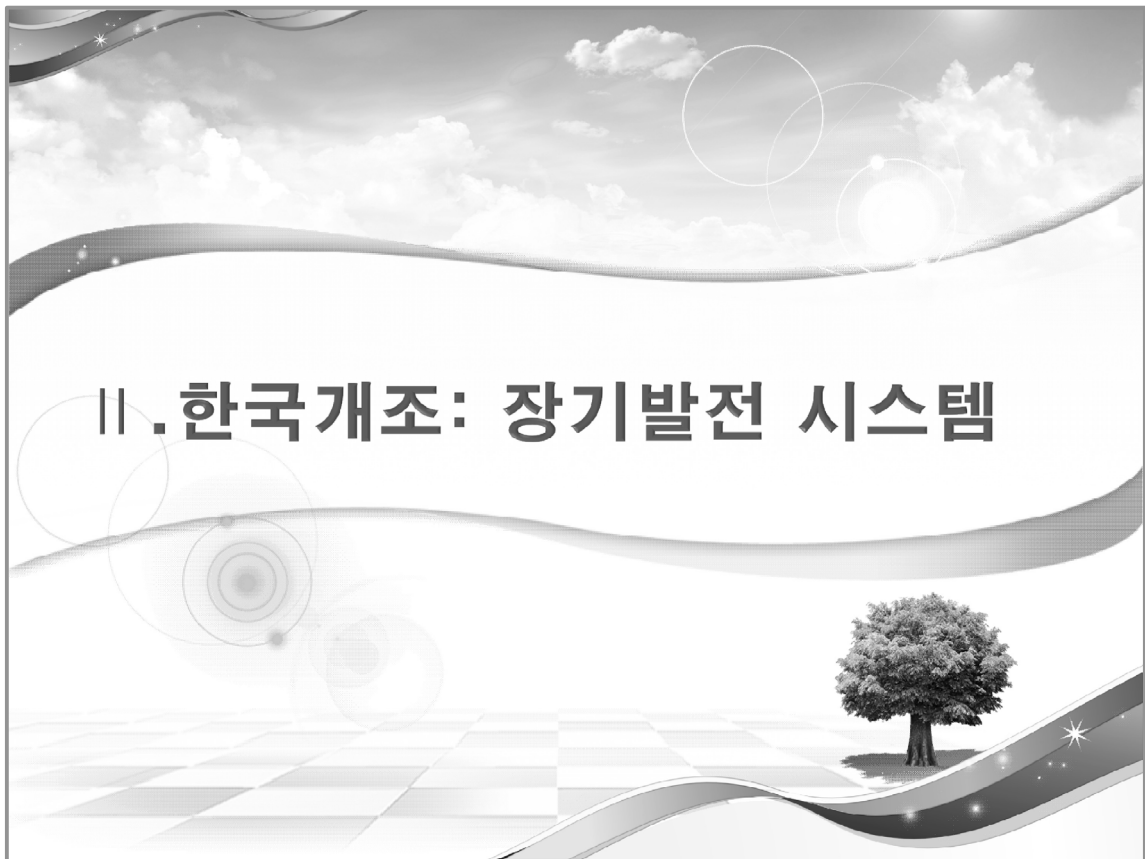
지금의 한국 현실은 어떤가?

- ❖ 특권 정치인들은 입법 부정 결탁하고, 책임의무는 기피,
- ❖ 군대 간 아들 전화 받은 엄마는 군 지휘관에 호통치고,
- ❖ 정피아 관피아는 원전비리, 철도, 저축은행, 해난, 방산비리, 귀족노조,
- ❖ 지역이기, 안전사고에 연계된 갈등은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 ❖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다시 시작 하자.
- ❖ 교육, 교육, 그리고 또 교육으로 개조해 보자(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8



II.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비전 목표

주변강국 시이 에서 생존 위한 경제력수준, 국방안보, 복지공존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적효율의 국력을 장기비축 해야 경쟁과 침략에서 국가를 보존 할 수가 있다.

국가 장기 시스템 개조

(효율강국)

정치경제
(협동효율,
최적균형)

국방안보
(세력균형,
신뢰형성)

복지사회
(기초보장,
협동협치)

10

II.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1. 정치경제(협동효율, 최적균형)

비전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경제재정

- ◆ 재정균형: 해외투자 회귀(노사협동)
- (노사협동 -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 ◆ 노사협치(노사정위원회: 자동타결) : 비정치조항
- 투자회귀, 비정규직, 산학협동, 임금피크, 중소기업

정치행정

- 특권해소법(국회처우, 특권망국:
(정책책임제, 규제일몰, 정책승계)
(지자의원보수, 특권명시)

- ◆ 지속평가위원(국책의 장기지속 평가 후 승계)
- 의회(국회, 지방)수당 법정화, 전임정책승계지속

과학국방

- ◆ 과학강군: (산학협동-전산기능군-군산 취업
- 과학기능군(전산, 정보 기능군: 경력연계)

- ◆ 제4산업혁명: 정보과학
- 정보과학의 산업-군사 연계 경력관리

11

II.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2. 국방안보(세력균형, 신뢰형성)

비전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안보균형

- ◆ 대외의존 취약성: 첨단국산화-과학기능군
- 방위노출 취약성, 기간시설(전기, 수도, 가스)

- ◆ 첨단방위산업
- SLBM(핵추진 국산+핵미사일 리스)

외교균형

- ◆ 세력균형: 방위협력(한미동맹, 한중러 협정)
- 평화협력(신TPP, 신Altai+러 문화벨트)

- ◆ 경제통상 선도전략
- (신TPP, 신APEC, 환동해 협력체)

통일균형

- ◆ 통일신뢰: 비정치개방, 탈북주민 자립표본
- 비정치 동질화 정책(장기 동질화 신뢰구축)

- ◆ 신뢰성 구축: 자립지원, 교육지원, 창업지원
- 탈북 자립성공(교육지원+노동부 취업교육)

12

II .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3. 복지사회(기초보장, 협동협치)

협동복지

- ◆ 협동효율: 시장형 일자리 창출
- ◆ 재능기여 일자리

기초보장

- ◆ 5대기초(소득-의료-주거-교육-서비스)
- ◆ 사각지대

전달협치

- ◆ 공공-민간협치, 분절칸막이 방지
- ◆ 전달분절공공중심

환경농업

- ◆ 환경농업: 환경도시, 태양발전 군집전략
- ◆ 환경 에너지

13

II . 한국개조: 장기발전 시스템

II

국가장기적인 발전 전략

경제구조

- ◆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혁신구조, 정책의 성과책임제로 재정균형, 총력안보체계로 이스라엘과 스위스처럼 효율적인 방위체계로 초강력 독자방위능력

외교분야

- ◆ 외교에 있어서는 세력균형전략, 통일비전은 비정치 분야의 조건 없는 지원으로 통일신뢰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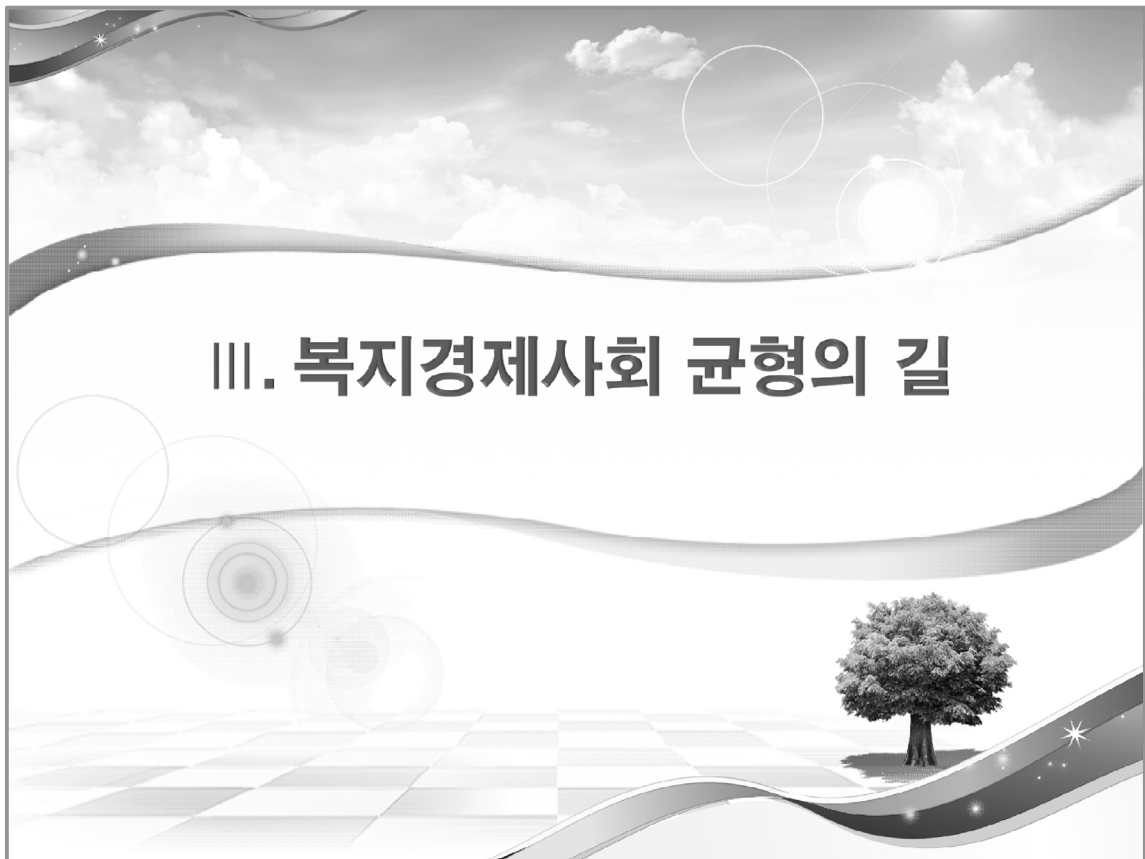
복지효율

- ◆ 복지효율로 공동체안정, 사회적 특권을 부여 받은 자는 상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구공동체

- ◆ 의식개혁: (상호 공존하는 배려와 타협이 없고, 준법의식이 미약, 사회갈등 심화)
- ◆ 지구 공동체: 건강한 지속을 위한 환경도시 등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

14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복지전달 장애

- 전달망은 민관협치(전달효율-신속정확)인 변화대응

행정과잉 정부의 공공중심-행정보고 과잉: 지자체는 업무수행 마비

자원분산 남발된 프로그램(360개)에 예산이 분산:효과 미미

높고먹기 업무의 칸막이: 소통 없이 형식적 업무 추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원화 문제, 정서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취약지역,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균형적 개혁방안을 제시.

16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1. 생존균형(공존기회)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생존균형(공존기회)	<생태공존>	*평형성 회복(항상성)
①생존보장	-사각지대 기초보장	①기초보장
②생태균형	-생태균형성 파괴	②생태공존
③지속가능성	-과잉점유, 과잉소비	③적정성 평가
④사회갈등	-공동체 생존경쟁	④협동공존 조정

17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2. 자원균형(지속가능)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자원균형(지속가능)	총자원균형	<자원효율>: 최적배분
①자원균형	-자원고갈	①총체자원/대체계획
②재정균형	-국가부채	②재정안정 단계설정
③적정평가	-자원낭비	③적정성 산출
④고령자원화	-고령 재능기부	④고령인력 बैंक

18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3. 정서균형(안정행복)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정서균형(안정행복)	정서 파괴	<정서평형>:모듬돌봄
①삶의질 위기	-자살, 스트레스	①멘토링 봉사
②가족보호(가정갈등)	- 가족해체	②위기상담
③노인정서	-노인소외	③노인봉사, 고령재가치유
④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④재능지도 멘토링
⑤장애인 취업	-장애차별	⑤기능교육

19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4. 전달협치(공공-민간)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전달협치(공공-민간)	전달불통	<통합효율> 협동협치
①기관별 분절	-기관별 개별사업	①성질별 통합조정
②부서별 분절	-부서별 칸막이	②대상별 통합조정
③프로그램별	-동종이법, 사업별 칸막이	③규정통합, 모듬돌봄
④자원봉사 분산	-산발적, 중복낭비	④네트워크 형성, 재능기부

20

III. 복지경제사회 균형의 길

III

5. 사각지대(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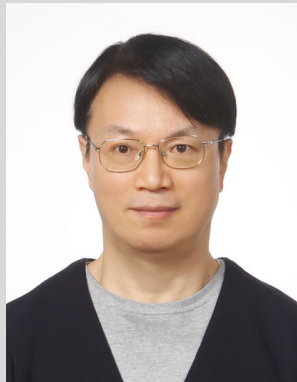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사각지대(취약계층)	기초보장 사각지대	<통합조정=> 복지+보건+정서
①빈곤-장애	-빈곤의 악순환	①통합대책(자활자립)
②자기실현	-자기결정 기회	②고령, 장애 자원화
③노인(고령자원화)	-고령자원낭비	③고령인력 자원화(독립정서)
④여성/가족/청소년	-가족해체	④종합대책(기능투자)
⑤자활기능	- 자활프로그램 산발적	⑤기능교육, 창업지도

21

IV. 정책결론

- 세계사에 유래 없는 한국민의 평화적 집단지성 시위는
공정사회와 미래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 유능하게 수행 하는 리더십이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
으로 협동협치 하여 최적효율(평형성=균형)이 달성
- 성장과 고용(일) 이 확대되고, 공평한 분배(빵)가
이루어 저서 양극화가 해소, 안정된(행복)사회에 접근.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 고재방 (전 교육부차관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고 재 방

1

1. 불편한 진실

-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의 먹이 사슬이라는 인식이 팽배
- 꿈과 희망을 잃고 불만과 분노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
-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온갖 검찰 비리, 특권과 갑질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편한 진실

2



3

사례 1: 삼풍백화점 붕괴

-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전체 건물이 20초만에 폭삭 주저앉음
-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6명 실종자 발생
- 피해자에 대한 보상 3천억 원, 관련 업체들의 피해는 8백억 원

4

- 본래 지상 4층 일반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을 건축주가 5층 백화점으로 바꾸려고 서초구청과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뇌물비리가 빛은 참극
- 담당 공무원들을 감봉 등 경징계로 마무리해 불공정한 사회라는 비판 자초

5



6

사례 2: 세월호 참사

-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 침몰하는 세월호는 불공정한 한국 사회의 축소판 -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는 모습은 위기에 처하면 몰래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같은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평가

7

-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 (관피아)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하여 민관 유착을 통한 안전점검 부실이 참사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
- 퇴직 공직자들이 비리 공기업과 사기업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공정한 사회

8

2. 부패가 경제성장, 혁신, 평등을 저해하는 장애물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투명도가 매우 낮음
- OECD는 부패가 경제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

9

[표3] OECD 국가 2015년 CPI 현황

2016.1.27 / 한국투명성기구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	2015 CPI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	2015 CPI
1	1	덴마크	91	18	17	일본	75
2	2	핀란드	90	23	19	칠레	70
3	3	스웨덴	89			에스토니아	70
4	4	뉴질랜드	88			프랑스	70
5	5	네덜란드	87			포르투갈	63
		노르웨이	87	30	23	폴란드	62
7	7	스위스	86	32	24	이스라엘	61
9	8	캐나다	83	35	25	슬로베니아	60
10	9	독일	81	36	26	스페인	58
		룩셈부르크	81	37	27	체코	56
		영국	81			대한민국	56
13	12	호주	79	50	29	헝가리	51
		아이슬란드	79			슬로바키아	51
15	14	벨기에	77	58	31	그리스	46
16	15	오스트리아	76	61	32	이탈리아	44
		미국	76	66	33	터키	42
18	17	아일랜드	75	95	34	멕시코	35

10

-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부패정도가 심한 11개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한국은 9위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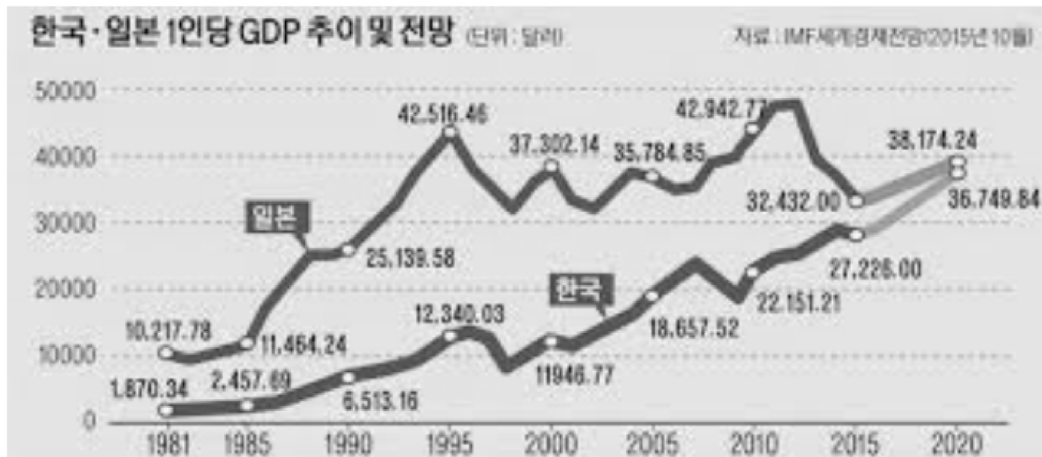
12

Q6	전혀 부패하지 않음				매우 부패
아래 분야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보십니까?					
정당	0%	5%	25%	45%	26%
국회/입법부	0%	8%	28%	39%	24%
군대	2%	25%	42%	25%	6%
NGO(시민사회단체)	5%	36%	40%	18%	3%
언론	2%	21%	42%	30%	6%
종교단체	2%	16%	40%	31%	12%
기업부문/민간부문	0%	19%	48%	28%	5%
교육부문	2%	26%	42%	25%	5%
사법부/법률부문	1%	20%	42%	30%	8%
의료/건강부문	2%	30%	47%	18%	3%
경찰	2%	19%	44%	28%	7%
행정관료/공무원	1%	16%	46%	28%	9%

13

- 한국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국가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 한국이 OECD 수준으로 청렴도를 끌어 올리면 잠재성장율을 4% 정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14



15

- 워싱턴포스트 (2016년 11월 16일)는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을 보면 한국병, 부패는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함
- 부패가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고 공무원 부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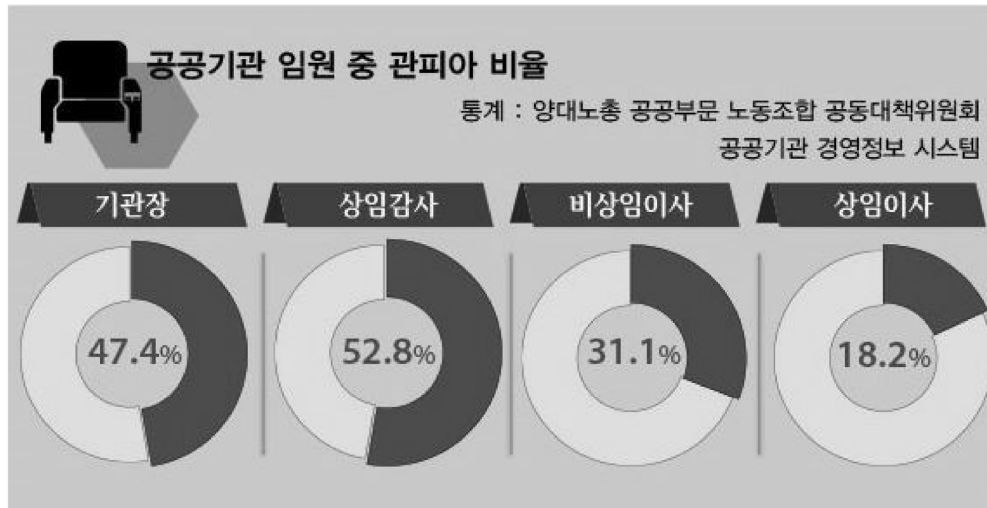
3. 관피아 척결로 공직사회 부패사슬 단절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입법하였으나 2016년 현재 서울메트로 사건,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이 관피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17

- 고위 관료들은 퇴직 후 관련 공기업이나 유관기관,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해 민·관 그리고 전직과 현직이 유착하는 부패 카르텔을 형성
- 정부관료 + 사업자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전직관료 + 특정 사업자와 유착된 교수로 구성된 관·산·학 복합체로 부패 카르텔을 형성

18



19

관피아 발생 원인

- 관피아는 관료, 법관, 검사들이 퇴직 후 공기업, 로펌, 세무·회계법인, 민간단체(영리·비영리 포함) 등 정부 업무 위탁기관에 재취업하여 민관 유착과 관료 부패를 양산
- 퇴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회, 기업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어렵게 하여 특혜를 받거나 규제를 피해가는 것

20

-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관료의 재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기대하는 사익 추구
- 관료가 공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특권을 누리려 한다면 그런 관료 사회는 백해무익할 것
- 관피아 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결여, 전 관예우라는 서열문화, 공직자 윤리의식 부족에 기인

21



22

사례: 교육부 관피아 (교피아)

- 교피아가 재취업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 눈감아주기'가 만연해서 비리, 횡령 등의 학내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재정지원금 몰아줌
- 교피아들은 필요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들을 양산해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

23

〈교육부 조직 관료의 사립대학 총장취임 후 교육부 재정지원금 변화〉



대학명 (총장명)	총장취임	교육부 당시 직급	교육부 재정지원금 증가액
동명대 (설동근)	2012 . 6	차관	2011년 33억 2,479만원 → 2012년 212억 7,117만원
대경대 (김은섭)	2012 . 7	감사관	2011년 15억 4,370만원 → 2012년 52억 4,813만원
오산대 (서범석)	2012 . 11	차관	2011년 14억 3천만원 → 2012년 54억 5,124만원
금오공대 (우형석)	2009 . 3	차관	2010년 384억 6,700만원 → 2011년 445억 7,357만원
한국국제대 (김영식)	2011 . 4	차관	2011년 15억 5,128만원 → 2012년 41억 3,953만원
위덕대 (서남수)	2012 . 9	차관	2011년 14억 5,689만원 → 2012년 26억 2,031만원

24

외국 사례 1: 미국

- 연방법으로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상세하게 구분해 민관 유착을 방지
- 공직자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영구 제한, 2년·1년 제한, 적용 제외를 뒤 업무 연관성이 클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
- 퇴직 관료가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달러(약 515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

25

외국 사례 2: 독일

- 고위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재취업 제한
- 규정 위반시 연금박탈, 삭감, 압류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뒤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 방지
-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민관 유착을 감시

26

외국사례 3: 영국

-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까다로운 공직자 재취업 사전 승인 제도 채택
- 퇴직 관료가 재직 당시 얼마나 예비 고용주와 업무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심사

27

외국사례 4: 일본

- 2008년 퇴직 관료들의 공기업 및 사기업 재취업을 의미하는 아마쿠다리 관행을 한 차례만 허용함으로써 여러 곳을 옮기 다니는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

28

관피아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 공무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 기관 업무 전체로 확대
- 취업제한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 1만5000여 곳으로 확대

29

관피아 해결 방안의 미비점

- 취업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
-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빠졌다는 비판

30

- 취업제한보다는 행위규제를 통해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함
- 취업제한 기관을 리스트화 하는 후진국형 대책보다는 행위규제가 가장 강력한 관피아 척결방안

31

개선방안

- 2016년 9월28일 발효된 김영란법과 병행하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전관예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가 필요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 공직윤리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한과 위상이 분명한 공직윤리전담기구 필요

32



33

4. 견제받지 않은 검찰 특권이 사법 정의 파괴

- 2012년 억 대의 금품을 받은 김광준 부장
검사가 구속됐고 그 후에도 벤츠 검사나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와 같은 검찰 비
리 계속 발생
- 2016년 홍만표 전 검사장은 100억원대 수
임료로,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126억원 주
식 대박, 한진그룹 수사 무마 대가로 130
억원 일감 몰이 혐의로 구속

34

- 전직 검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각,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직무유기 등으로 사법처리 받을 가능성
- 검사 출신들이 국정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파견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전문성을 빙자해 검사들을 파견받아 사실상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의 식민지로 폄하되고 있음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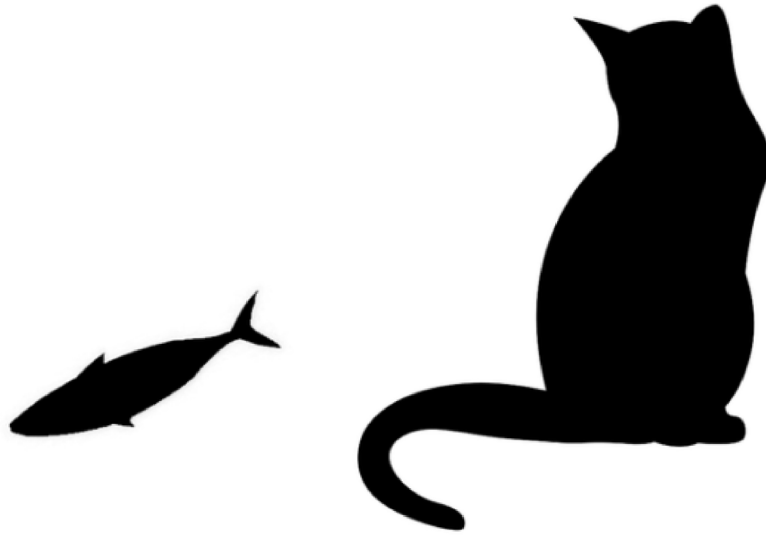
검찰 특권

- 검찰비리는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과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
-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정 수사와 하명 수사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

37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대한민국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
-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 10만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하는 권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독점 청구하는 권한, 범죄인을 기소하는 권한,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봐줄 수 있는 기소재량권한, 형집행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

38



39

검찰개혁 1: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검 중수부 폐지는 미니 중수부인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도루묵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검사의 청와대 및 법무부 파견 관행은 오히려 심화
- 공수처 설립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독점적 사건처리를 배제하고 특권 지역에 머물러 있던 검사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 문화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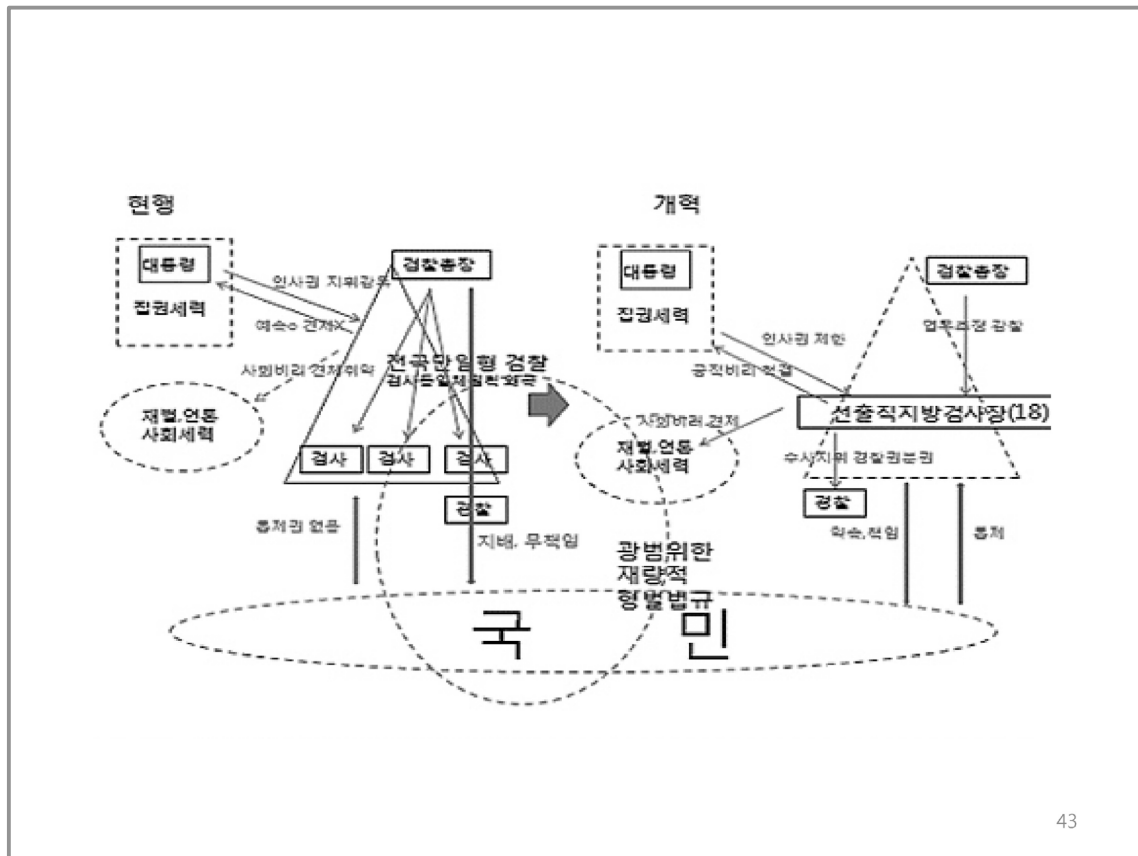
40

- 적절한 차단기구와 제도가 없이는 전관예우, 금품 수수, 고위직 부패 행위가 근절되기 힘들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갖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타파

41

-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최근 야당 공동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10번째 법안)을 발의
- 홍콩의 엄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 반부패수사기구가 설립된 뒤 고위공직자 부패가 현격히 줄어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42



43

검찰개혁 2: 검사장 직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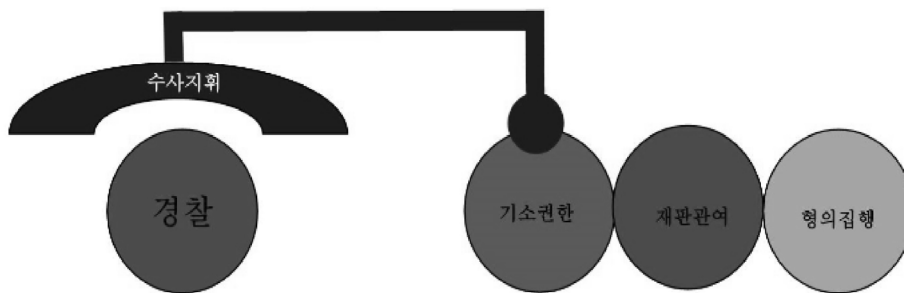
-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방안 마련
- 시민단체들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교육감처럼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를 제안
-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제안

44

외국사례: 미국

- 대부분 지역주민이 주검찰청 및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을 선출
- 주민선거로 검사장을 뽑지 않는 주는 8개에 불과함. 하와이, 뉴저지 등 일부는 주지사가 검사장을 지명하고, 메인은 입법부가 선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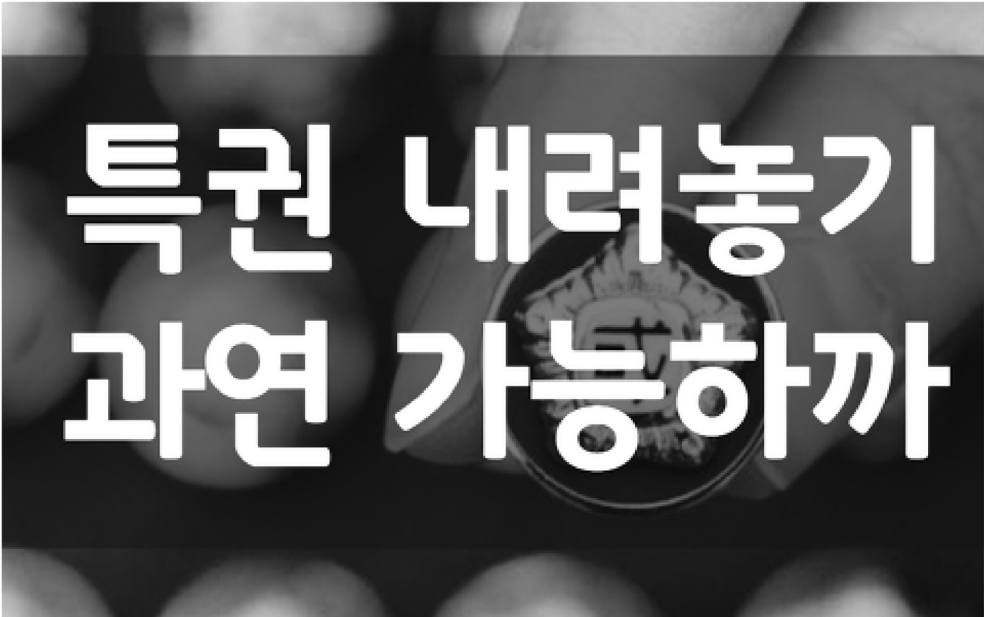


46

검찰개혁 3: 수사권 기소권 분리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해야 함
- 영국은 원래 검찰이 없었고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분리
- 검찰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견제

47



**특권 내려놓기
과연 가능하까**

48

5.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개혁의 시발점

-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 제도권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
- 온갖 뺑쇼를 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국민에게 군림

49

- 구태정치를 바꾸기 위한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39.4%로 1위를 차지 -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인식
-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지원하는데 약 35억 원의 세금이 소요 - 국회의원 300명을 4년 동안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1조 500억 원의 세금 낭비 방지 필요

50



51



52

외국사례: 영국

- 의원들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하는 게 일반화되어 의원들의 특권의식이 낮음
-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특권을 줄이려고 지속적 노력

53



54

한국 국회의 생소 사례 1

- 2012년 19대 국회가 출발할 때 여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모두 약속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공약
-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속하였으나 선거 후 폐기

55

- 새누리당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민주통합당 5대 약속은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검토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의원윤리 심사제도 강화

56



57

한국 국회의 생소 사례 2

-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관련해서 15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한층 더 높아졌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58

- 시민단체들은 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국회법 제27조를 개정해서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

59

W 역대 체포동의안 사례		19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		
	⊙ 박주선	가결	→ 구속	→ 무죄
	⊙ 정두언	부결	→ 구속	→ 무죄 취지
	⊙ 박지원	출석	→ 철회	→ 무죄
	⊙ 현영희	가결	→ 불구속	→ 유죄
	⊙ 김영주	실형	→ 폐기	→ 유죄
	⊙ 이석기	가결	→ 구속	→ 항소
	⊙ 조현룡	?	→ ?	→ ?

6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 ·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서 1603년 처음으로 법제화 -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 - 각국 헌법에서 보장
-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적인 불법을 저지르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61

-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56건 - 이 중에서 13건이 부결됐고 24건은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 - 체포동의안 56건 중 37건이 방탄국회의 장벽에 막힘
- 2005년 7월부터 국회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였으나 - 폐기 가능성 상존

62

국회의원 면책특권

- 영국에서 1689년 권리장전 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한 의회의 특권으로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였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

63

사회적 문제가 된 면책특권 사례

-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방송국 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간부는 성추행 전력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짐
- 2013년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급 비밀문서였던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회 밖에서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기소됨

64

- 2010년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조건으로) 미국 아멕스 여행자수표 1000달러 짜리 묶음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대우조선해양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무죄
- 2005년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삼성 X파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하고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의원직 상실

65

- 2003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썬앤문 그룹 녹취록에 따르면 김성래 전 부회장이 이호철 민정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에 95억원을 줬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

66

-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 특권 남용을 방지
- 면책특권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회법상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서는 안됨

67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채용 백태

친인척 채용	- 친인척 취업 통로, 음성적인 자금 관리 등 탈법, 불법적 행위에 활용. - 보좌진 월급을 후원금으로 빼돌리기, 회계처리 등 민감한 업무 담당.
보은채용	- 지역 유지, 후원회장 등 지인 청탁으로 보좌진 채용 - 보좌진 업무 소홀한 채 월급만 지급.
품앗이채용	- 공천권자의 요청이나 당내 사정으로 개인 뜻과 무관하게 보좌진 떠안기.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68

친인척 보좌진 채용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동생을 비서관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조카를 비서관에, 동서를 인턴에 채용하고, 송광호 의원은 딸을 비서관에, 문대성 의원은 매형을 비서관에, 정양석 의원은 동생을 보좌관에, 조카는 비서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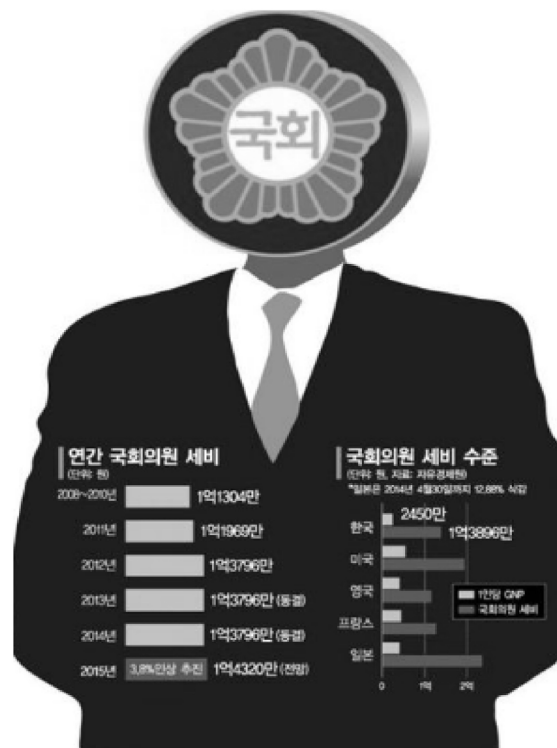
69

-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 -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 - 인건비로 3억 9,513만원이 지원
- 도덕적 해이가 심한 어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7명의 이름만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2~3명만 근무 - 유령 보좌진의 급여액을 자신이 가로채는 불법행위까지 자행

70

-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수당법(제9조, 제9조의3)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법률로 금지 -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본인의 보좌진으로 채용 금지
- 본인의 보좌진으로 4촌을 넘어서는 6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나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는 국회의 장에게 신고

71



72

국회의원 세비의 셀프 결정

- OECD 국가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1위 일본 204,868 달러, 2위 미국 174,000달러, 3위 한국 170,887달러이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만 달러 이하,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50,000~70,000달러 수준에 불과
-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GDP의 약 2~3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5.6배

73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일반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자기 월급(세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 국회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통과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세비를 셀프 결정

74

-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와 자녀유학비 등으로 사용 -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야기 -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쓰듯이 하는 구시대 관행
- 시민단체들은 선진국에서는 급여 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 -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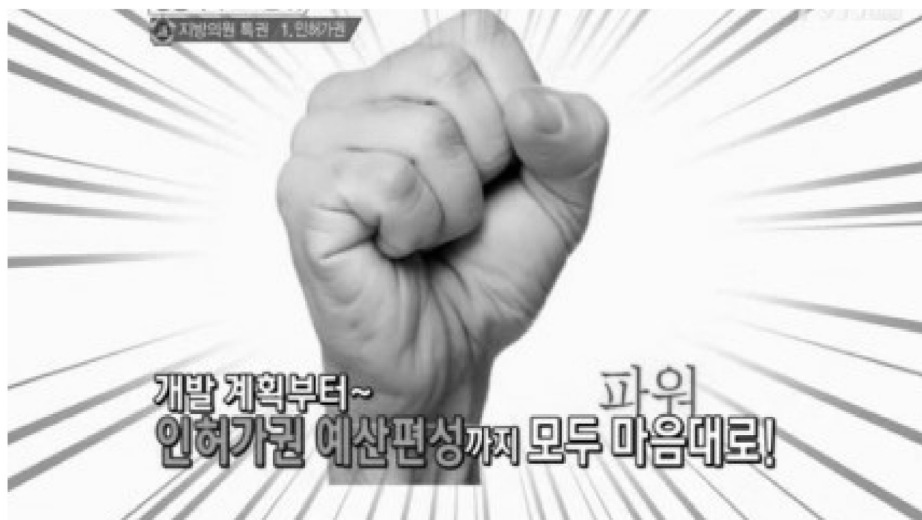
국회의원 3선 제한

- 국회의원의 3선 제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 수렴
- 국회의원의 선수 제한이 없는 경우 돈과 조직을 장악한 현역 의원이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 집권하면 특권의식에 젖어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려고 하기 보다는 특권층 행세
- 제한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국회의원의 3선 제한 도입 검토

76

-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내려놓기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 중이지만 입법화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듯
-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우선 이것부터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선해 주기를 기대

77



78

6.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주민자치 실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 - '지방의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는 설문에 69.1%가 '부정적' - 58%는 지방의회가 주민 의견 대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답변
- 201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국민들의 73.5%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평가

79

- 지방의원들의 뇌물 수수 및 횡령이 빈발 - '지방의회=부패의 온상'이라고 인식
-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80

올해 지방의원 연봉은

단위:만원,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서울시
의원 6804(118)

16개
광역 시도
의원 평균 4686(50.1)

전체
지방의원
평균 2875(30.8)

※5월 11일 현재, 250개 자치단체 중 235개
자치 단체가 연봉을 결정했음. 자료:행정자치부

81

지방의원 유급제

-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여 기초의원에게 5천만 원, 광역의원에게 7천만 원을 지급
- 법적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 (60~70% 인상)
- 처음에는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지방의원들이 지금은 상전으로 군림하며 갑질

82

유급제 개선방안

- 지방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및 의정수당 지급 규정 제정이 필요 -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에 관한 규정 참조
-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정비 개념 정립 필요 - 생계 급여(보수) vs 활동비
- 급여로 규정한다면 원천적인 겸직금지가 전제되어야 함
-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 구축 - 조례 제정

83



84

지방의원 검직

- 직무이용 이권개입, 입찰 및 관급공사 비리, 부동산 투기, 지역토호세력과 결탁
- 현재 대표자 명의만 변경 (가족 및 친척 등)으로 사실상 검직
- 유급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음

85

지방의원 검직 개선방안

- 적정수준의 의정비 책정 - 보수와 수당 구분, 예산편성시 예산항목 세분화
- 원천적 검직 금지 및 가족 및 친인척 검직 제한 규정 신설 - 전주시 조례 참고

86



87

관광성 해외연수

- 관광성 해외연수 관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의원 자질과 윤리의식 문제
- 연수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여행지 선정이 우선되고 있음

88

관광성 해외연수 개선방안

-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 - 규정 또는 조례 제정
- 심의위원으로 외부인사 2/3이상 참여, 연수기획서 및 보고서 심사 철저, 예산의 적정성, 연수목적과 방문지의 타당성, 연수일정의 합리성 등 체계적 심사

리더십 한림원

(www.lhgl.n.com)

인류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환경파괴, 기아와 질병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연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기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정파나 이념을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사회공헌기관이다.

① 지도자의 리더십의 목표

시민에게 봉사하는 리더십은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협치로 힘을 모아서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② 지도자교육의 방법

- 국정운영능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 책임과 봉사의 지도자 윤리와
- 정책분석과 협치를 교육 한다

③ 지도자의 정책비전

- 민주주의를 선도 하는 리더십은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을 목표로 하고,
- 협동협치로 힘을 모아 최적효율의 <균형의길>을 달성하여,
- 성장과 공평한 분배로 양극화를 해소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

④ 지도자 교육과정: 온 라인 교육

- 시민지도자: 일반시민의 봉사지도자 중에서 나눔과 재능기부로 인증된 사람이 지도윤리, 지도기술, 국가정책분석 과정을 이수한 자
- 글로벌지도자: 시민지도자 중에서 국제사회 비교분석 과정을 이수한 자
- 최고위지도자: 글로벌 지도자 중에서 최고정책과정을 이수한 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5. 04.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1급, 2급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 2015. 04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2015. 04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수료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발급
- 2009.10~ 분기별 복지현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 책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 근거요청으로 제공, 영구보존)
- 2014~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 2016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통일부 『통일박람회 2016』 참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민간감시활동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